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文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기반은 R&D”

文 대통령 과기연서 국무회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경제강국 위한 국가 전략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이 한기원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만들기' 각오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됐다”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다. (우리나라) 철강·조선·반도체·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산업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 원천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연구원 내) 미래로봇 분야·미디어연구소·차세대 반도체연구센터가 그 현장”이라며 “경제강국 건설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히 여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 전략 과제”라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

넘어 한국경제 100년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 (또)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이라고 했다.

실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간 외교갈등이 극에 달하자 아베 정부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 전선을 구축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탈일본 특화 주식형 펀드(NH 필승코리아 펀드,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리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가입’ 및 그달 28일 울산 내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 등 대일경제행보를 선보였다. 이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 역시 대일경제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화는 세계경제·교역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전략”이라며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국제분업구조 변화까지도 대비해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현장 국무회의 개최는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올해 100주년 맞이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첫 현장 국무회의를 연 바

/우승준 기자 dn114@

소·부·장 자립에 추경 2179억 투입

(소재·부품·장비)

산업부·중기부·과기정통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179억원을 지원한다. 조기 공급 안정화 25개 품목은 이미 지난 8월 말 기술개발에 들어갔고 6개 기초원천 소재도 이달 중 기술개발을 시작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추경 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달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 중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는 2179억원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기술개발은 ▲ 공급안정화 수요와 산업적 연관 효과가 큰 핵심 전략 품목

▲ 기업 수요에 기반을 둔 국산 대체 가능 품목 ▲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수 소재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핵심 전략품목 25개는 기술개발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 절차 없는 정책 지정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현장 수요 품목은 국산으로 대체할 기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과제 공고와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초 기술개발을 시작할 방침이다. 기초원천 소재 6개는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 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단을 뽑아 이달 중 기술개발에 들어간다.

이렇게 개발한 소재·부품·장비는 수요 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시험장) 확충과 실증평가를 지원한다. /석대성 기자

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임박 “합리적 금액 정해 선제 요구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美 입장 대한 대응논리 보단 합리적 지원 방안 마련해야

‘한미 방위비 분담금’ 11차 협상이 9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일 북한이 발사체 2발을 쏘면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차 협상에서 정부가 미국 입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기보다는 ‘합리적 분담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요 예상 의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 역할이 일반적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 이익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담금 총액 결과에 따라 동맹 성격을 결정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수립 자체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특별협정(SMA)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10차 한미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양국은 이달 중 11차 SMA를 개시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는 분담금 증액 상한선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여부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중단과 특별협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양국은 10차 협정에서 대치 끝에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안보 위협에 따라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 정부의 외교방식 특성상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안보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실제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6조 원)를 차기 분담금으로 요구했다는 후문이 정치권에서 돌기도 했다.

문제는 방위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규칙이 없어 매년 협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협정문에 명시한 ▲군사상 필요 ▲군사상 소요 ▲필요한 현금 규모 ▲적절한 조치 ▲현물

지원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등 용어에 대한 확대해석 여지가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보완적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형혁규 연구관은 보고서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발굴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탐다운(상의하달식) 협상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제와 상관없는 외부요인으로 협상대상국을 압박한다는 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특별협정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선 한국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미국의 ‘결과중심’ 사고를 ‘가치중심’ 사고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與 ‘민생 돌보기’ vs 野 ‘조국 투쟁’ 총력

상반된 여야 추석민심잡기 전략

추석을 앞두고 정치권의 민생 잡기 전략은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섰고, 보수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비판과 불경기 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당정(여당·정부)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협의를 실시하고 “온라인·스마트화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며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소상공인 스마트화 촉진 ▲기술계승과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확산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육성 ▲5조 원 규모 특례 보증 등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등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회의 후 “온라인 쇼핑의 증가와 4차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미국-중국 무역마찰 확대와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정책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어 “(이번 협의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소상공인 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장외투쟁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정책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현장소통 등을 통해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투쟁집회를 열며 본격적인 대외공세에 돌입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신촌과 왕십리, 반포동, 종로 등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 규탄에 나섰다. 황 대표는 순회에 앞서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폭정을 막기 위

해 분연히 일어서 싸워 이겨야 한다”며 조 신임 장관 파면 국민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기치로 내건 사법개혁에 대해 “거짓 정권의 거짓 장관을 내세운 거짓 개혁”이라며 “사실상 사법 장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 장관 임명철회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며 “당장 오는 12일부터 추석 전야제 성격의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잘못됐다”면서도 “민생이 우선”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처리를 제안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장관 자리 하니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된 것은 분명 비정상”이라며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고 국민계유약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5건이 1년 반 전부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소상공인법적 지위와 보호, 육성, 지원을 명목화한 기본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평화당은 전날 을지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백년가게 지키기 결의대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석대성 기자, 송태하 수습기자